



## 환자 연명의료 중단 시기 임종기 직전서 앞당긴다

사전의향서 온라인 등록도 가능  
'임종 난민' 막기 호스피스 확대

정부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현재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에 호스피스 병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존엄한 죽음을 원하는 국민이 늘었지만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걸림돌이 많다"며 이 같은 시행 방안을 밝힌 바 있다.(본보 5월 11일자 A1·8면 참조)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한다. 임종기는 수일 내, 말기는 수개월 내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뜻한다. 의료계에선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앞당겨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가능해진다. 더 편리하고 손쉽게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등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 후 호스피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요양병원과 응급실 등을 전전하는 '임종 난민'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조유라 jyr0101donga.com·신예린 기사  
▶8면에 관련기사

## 오늘 6·3 지방선거 본투표... 국회의원 재보선 14명도 선출 민주 "지방권력 교체-내란 심판" 국힘 "李정부 폭주 막아야"

4년마다 우리 동네 지역 일꾼을 뽑는 '선택의 날'이 돌아왔다. 여야는 2일 밤 12시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치며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권력 교체를 통한 내란 심판 완수"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국정 운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 달라"며 견제론을 내세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28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선 전국 시도지사 16명과 시장·군수·구청장 227명, 광역·기초의원 3968명, 교육감 16명 등 지역 일꾼 4227명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된 지 꼭 1년 만에 치러져 임기 4년의 당선자들은 이재명 정부와 임기를 같이하게 된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4곳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거가 치러진다. 여야 중량급 정치인들이 나선 만큼 향후 여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활기찬 미래로 나아가기나,

다시금 내란의 망령에 발목 잡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꼭 투표장에 나서 달라"며 "부정부패 국민분열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파괴 폭주, 인생 붕괴 폭정을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며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

대통령의 오만은 마지막 데드라인을 넘을 것"이라고 맞섰다.

두 대표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택했다. 정 대표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피날레 유세를 했고, 장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공식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상경해 밤 12시까지 청계천과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도보 유세로 투표를 독려했다.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단순한 투표권 행사를 넘어 정치가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며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3·4·5면에 관련기사

## 세번째 사고 한화에어로 "수십년 관행따라 작업"

"年2회 합동점검" 실제론 1회뿐  
경찰, 안전수칙 준수여부 조사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관계 기관이 2일 첫 합동 감식을 벌였다. 그러나 사고 건물이 전소되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 측 역시 "관행에 따라 작업을 이행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면서도 정확한 폭발과 화재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대전사

업장에서 소방 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식에 참여한 대전경찰청 감식원은 "유의미한 증거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전소돼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폭발 원인과 함께 두 차례 사고 뒤 한화에어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고체 추진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졌다. 당시 두 차례 특별감독에서는 안전 교육 미흡, 화학물질 관리 부실 등 총 56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회사와 대전시 등은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방 당국은 이

날 "점점은 연 1회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소방 당국 등은 화재 대응 등을 위한 안전 설비가 미흡해 피해가 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56동 세척공실에는 스프링클러와 대단위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피해 건물의 소방 안전시설에 대해 "20kg 대형 소화기 1개를 배치해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세 차례나 반복된 사고와 관련해 가재용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은 이날 "타성과 관성에 쫓겨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수십 년 된 관행을 따라 작업했던 것이 실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이정훈 jh89@donga.com·김태영 기자  
▶2면에 관련기사

## 李,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 합정 빠지면 안돼" 언급  
국힘 "본인 사건 공소취소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합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성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

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선거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재명에게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합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6면에 관련기사



"바다에서 밥상까지 함께!"

우리의 **안심활력제**  
**수산물이력제**

